

“호남 전폭적 지지 이재명 정부, 실천으로 화답해야”

정권마다 반복되는 호남 홀대

선거철 선심성 공약...실현을 저조
인사·공공기관 이전·SOC 등 배제
에타 통과도 수도권·영남권 편중
“환심 아닌 실질적 지원책 펴야”

선거철이 되면 호남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는다. 정권마다 광주·전남에 대한 장밋빛 약속을 내걸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 약속은 쉽게 잊혀졌다. 지역에서는 “정권마다 환심만 사고 결국 실망만 준다”는 말이 반복된다.

지난 20년간 각 정권이 내놓은 호남 관련 주요 공약은 △공공기관 이전 △국책 SOC 확대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실행력은 기대에 못 미쳤다. 문재인 정부의 ‘AI 메가시티’ 구상은 국립 AI연구소가 서울 양재에 설립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귀결됐고, 이명박 정부의 ‘남해안 시대’ 비전도 24조원 규모 계획 중 실제 집행은 약 5조원(실현율 22%)에 그쳤다.

공공기관 유치 실적도 아쉽다. 2023년 NST 통계정보 기준 수도권에는 국책 R&D기관이 42곳, 대전·충청권 17곳, 대구·경북 14곳이 있지만 광주·전남은 단 4곳(전자통신연구원 호남센터·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노화연구시설)에 그친다.

현재 논의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서도 호남은 ‘1차 이전 당시 혜택을 받았다’ 등의 이유로 주요 후보지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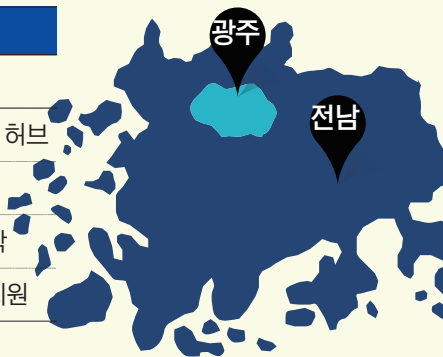
예비타당성조사(에타) 제도는 지역 격차를 구조화하는 대표적 제도로 지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자료집(2023)’에 따르면 2019~2023년 에타 통과율은 광주 약 30%·전남 약 10%였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40%대를 기록했다. 경제성과 인구 밀도 중심의 평가 기준이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군공항 및 호남권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광주·전남 국책 R&D기관 현황 (2023년 기준)

R&D기관명	주요 역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ICT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술 허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서남기술실용화본부)	뿌리산업·소재부품·등 기업지원 중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	첨단 분석장비 기반 연구지원, 기초과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화융합연구시설	노화특화 기초과학 연구, 융복합 연구지원



고위직 인사에서도 지역 불균형은 뚜렷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장·차관·수석 39명 중 호남 출신은 단 1명뿐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전남 출신은 단 1명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호남 출신 중앙부처 고위직 비율은 평균 9.4%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 들어 수석·실장 11명 중 5명,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9명 중 7명(36.8%)이 호남 출신으로 발탁돼 일정 부분 균형을 맞췄다.

문제는 지역에 유치된 기관조차도 실질 권한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다. 광주 AI 집적단지에는 실증과 데이터 가공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산과 정책 결정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진다. AI 센터 운영은 지역에서 하지만, R&D 사업 기획과 심의는 여전히 중앙부처 몫이다.

생활 인프라 격차도 여전하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며 광주는 대형 쇼핑몰·국책병원·복합문화시설 유치에 번번이 실패해왔다. 2020년 이후 전국 각지에는 코스트코·스타필드 등이 잇달아 들어섰지만, 광주는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다. 그동안 광주에서 가장 큰 복합쇼핑 공간은 백화점 단독 매장이나 총장·상무지구 상권 정도에 불과했다.

이제야 최근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 광주터미널 복합시설’이 2028년 전 개점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아직 착공 전 단계다. 개점 시기도 유동적이고 유통시설 중심 개발이 지역 소비 구조나 중소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 논의도 부족하다.

광주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지난 4월 민주당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호남뿐 아니라 수

도권 외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호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부처 본청의 서울 집중, 수도권·영남권 출신 편중, 폐쇄적인 예산 심의 구조 등이 지역 소외를 반복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성공회대 모 사회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 시설이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지역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장점 중 하나는 지역 인재 채용 기회다.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실질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락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제는 환심이 아니라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한 이전이나 지원이 아니라 권한과 예산·실행 로드맵까지 명확히 갖춘 중앙정부의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광주·전남은 전국 평균에 비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 역시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AI·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및 교통망 확충 등 호남 특화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이는 광주·전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접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62년, 당신 곁엔 MG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SINCE 1963
37 Anniversary
62nd
Pursuing the First & Great



설렘 가득한 영화 촬영 날



스타트업 창업 날



아름이와 친구가 된 날



손녀를 위해 적금 든 날



우리 아이 첫 소풍 날

응원이 필요할 때도,
새로운 시작 앞에서도,
기댈 곳이 필요할 때도,

MG새마을금고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62년의 신뢰, 앞으로도
함께합니다.

당신 곁에 함께
MG새마을금고